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0
----------	-----

발의연월일 : 2024. 6. 11.

발 의 자 : 추경호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현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철규 · 이현승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최보운 · 최수진 · 최은석
최형두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주 문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4. 6. 10. 제 41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함.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제안이유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으로 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채 의회 갈등을 야기하며, 편향적 의사일정을 진행함.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10일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작성 통지하는 만행을 보였음.

셋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제적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절차 안건상정 및 표결 등 의사 진행은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중대하고도 위법한 월권행위이자 권한남용임. 또한, 국회법(제48조)이 정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자로서 해당 대표권에서 유래하는 상임위원회 선임절차 참여 권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시켰음.

넷째,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무시한 채 특정 야당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간 합의 절차에는 충실히 임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기 개시 후 채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며 반민주적 의식과 발언, 편향적 행태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채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짓밟는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만을 가득 남김.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경제와 민생을 구하는 의회민주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바,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